

여야, 쟁점법안 논의...이견만 확인

조국 국정조사 등 요구...대정부질문, 의원별 질의시간 늘리기로

27일 예정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 변경도 이뤄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동섭 바른미래당,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가 23일 정기국회중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실시 계획서 등의 쟁점법안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정양석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비롯해 세부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여야 간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며 “여당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있고 검찰을 믿지 않고 있기에 국정조사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섭 원내수석 역시 “바른미래당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조장국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KBS 시청료 분리징수 등에 대한 여당의 협의를 요구했

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선 일부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도 이뤄졌다. 당초 27일 열기로 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수행 일정이 있는 까닭에 30일 예정된 경제 분야나 내달 1일 실시하기로 한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등과 순서를 바꿔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원욱 원내수석은 “모든 국무위원이 대부분 (대정부질문에) 참가할 수 있는 일정을 확인해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오후 2시 개의하기로 했고 의원별 질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 오후 7시30분에서 8시쯤 마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보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일부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고 이날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도 실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스1

조국자택 압수수색...與 “먼지털이식” 野 “과면 결단”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라고 반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면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관행 중 가장 나

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 관심사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문 대통령은 조국 과면 결단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시상

서는 안 된다”며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과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즉각 과면하라”며 “이번 검찰의 조치는 조국 일가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변 가족을 넘어 본격적으로 조국 장관을 겨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려했던 조국 장관이다. 애초부터 법무부 장관 자질도, 검찰 개혁 자격도 미달이었던 사람”이라며 “사실상 피의자로 전락한 조국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사수의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나쁜 선례를 남겼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로 밝혀지는 더 나쁜 사례만큼은 보여주지

말라”며 “나라를 구렁텅이로 끌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조국을 즉각 과면하라. 재인천하(在天下) 조국독존(曹國獨尊)의 시대, 국가적 혼란과 국정순실이 너무 크다”고 했다.

제3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이제 결자해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결국 벌어졌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혐의성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하는 극단적 대립 상황을 보며 국민은 할 말이 없다”며 “조 장관은 물론 정부·여당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민주당 “檢 개혁 막는 수사 아닌 진실 밝힐 수사돼야”

한국당 “文대통령, 조국사태 외면 안돼”...바른미래 “수치”

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라며 “한달 동안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밝혀진 진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조 장관의 경우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검찰개

었다는 우려는 있지만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근거로 조국 일가의 범죄에 대한 조국의 방조, 협력, 더 나아가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조국이라는 점을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방비를 이유로 심각한 현재 상황을 외면해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세대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1.1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은 거짓 아들 출산후 산후조리원 생겼다”

“땃땃하면 특검서 논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에 대한 원정출산 의혹과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제가 부산지법에 근무할 당시 서울 와서 아들을 낳았다 고 말해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둘(원정출산·이중국적 모두) 다 아니다. 땃땃하면 특검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진실을 무조건 승리한다.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는 덮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미국 한인타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원정 출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산후조리원의 설립일이 2000년인데 제 아들의 출생년은 1997년이다. 명백한 가짜 뉴스”

라며 자신의 아들이 가입한 학회에 대해서도 “예일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클럽이다.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회”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원정출산, (아들의) 이중국적을 어떻게 여론조작 하는지 면밀하게 봤는데, 국력 지지층을 동원해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리고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한다”며 “조작된 실감을 비합리적 매체가 쓰고 확대 재생산되며 더불어민주당이 논평까지 내면 매체를 통해 다시 확대 재생산이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특검을 제안하니 겁을 집어먹은 여당이 놀라 몰타기라고 한다”

며 “46%가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시 해야 한다고 하고, 29%만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정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항해서는 “테스노트를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 분노가 무서워 송구한 척 연기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조국 사태의) 주요 공범이다. 공동 정범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준표 “네 사람 자녀 특검해 누명 벗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 “네 사람의 자녀 특검이라도 해서 누명을 벗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당당해야 좌파들을 상대할 힘이 생긴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의혹 없이 대어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다”고 밝혔다.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